해결 여부가 흥망성쇠 판가름

금년이 지나면 지구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다. 2000년이 되면 1900년대로 돌아간다는 밀레니엄 버그문제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인류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시각에도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버그 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Y2k

시작된 벌레와의 전쟁

컴퓨터에서 발생한 밀레니엄버그(Y2K)는 사람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바퀴벌레보다 더 위협적이며 인류가 공동으로 싸워야 할 강력한 적이다.

인류가 만든 컴퓨터 때문에 발생하게 된 Y2K는 과학문명이 낳은 최대의 재앙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재앙은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컴퓨터가 사용되기 때문에 100% 해결은 불가능하겠지만 피해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는 있다.

각 국가나 기업들은 계획을 세워 2000년 전까지 Y2K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부 2000년문제 대책반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지난해 8월까지 각 부처별 영향 평가를 마치고 올해 2월까지 변환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2월부터 4월까지는 검증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8월부터 시험운영을 실시, 최종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해결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확신한다. 기술적인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작업으로 변환해 주는 것이다.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은 있으나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는 해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설치하는 방법이다. 시중에는 수억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여러 가지의 해결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다. 해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컴퓨터에 설치하면 사람이 손을 볼 필요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해 준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편리하나 경우에 따라 변환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모든 전산시스템을 교환하는 방법이다. Y2K 염려가 전혀없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면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은 곳일수록 교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최근에는 Y2K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가격이 배 이상 비싼 시스템들도 나오고 있다. 시스템을 교체해도 새롭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업무환경을 바꾸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첫번째와 두번째인 인력과 해결 소프트웨어를 함께 투입하는 것이다. 해결소프트웨어를 통해 변환작업에 쓰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문인력이 최종 마무리작업과 확인을 거쳐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시간, 인력, 비용이다. 2000년까지 채 1년이 못되는 시간과 변환작업이 가능한 인력의 부족, 해결 소프트웨어 및 필요한 경우 교체해야 하는 전산시스템 비용까지 3중고가 놓여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Y2K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능력이 많은 나라로 한국을 들고 있다. 변환에 필요한 코볼언어 경험자가 많고 직업의식 역시 가장 투철하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가트너그룹은 각국의 Y2K 대응도 조사에서 한국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 Y2K해결 여부가 국가신인도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즘 대단한 경쟁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Y2K에 대한 국가적인 적극 대응이 국가 신인도 회복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낳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조기에 벗어나게 하게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컴퓨터만의 문제 아니다

지난해 말 구호단체인 美 적십자는 전국의 지회에 긴급메시지를 보냈다. "Y2K 문제로 인해 구호물자 부족사태가 예상된다. 각종 소모품들을 최소 6개월분 이상을 확보하라. 우선 구매 소모품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 손전등, 소독약, 작은 모터…."

"시골에 땅을 산후 생필품을 비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인터넷 Y2K 포럼'의 최후 통첩은 엄포가 아닌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인류역사상 최대의 재앙으로 불리는 Y2K가 대분출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Y2K 대공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해결기술이 어렵지 않다는 데서 출발한다.

Y2K 해결 방법은 쉽게 말해 두자리로 연도를 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두 네자리로 바꾸면 된다. 98년 10월 1일 적금을 든 고객정보를 1998년 10월 1일로 바꿔주면 되는 것.

문제는 이렇듯 쉬운 Y2K 문제 해결작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이다. 엄청난 돈과 시간, 사람을 쏟아부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나라전체가 새해 벽두부터 Y2K 문제로 떠들썩한 것 또한 지난 수년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탓이다. Y2K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Y2K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96년초. 당시 기업 · 단체장들은 Y2K 문제를 접할 때면 으레 전산책임자를 불렀다. 전산책임자의 대답은 언제나 '해결할 수 있다'였다. 최고경영자들 사이엔 어느새 '전산실에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주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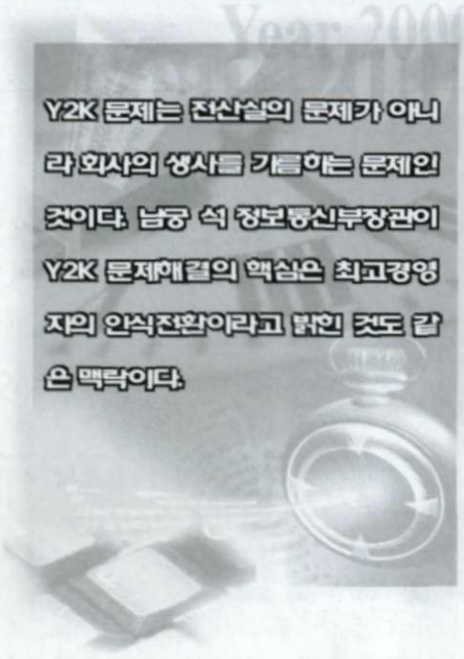
그러나 불행하게도 Y2K 문제는 전산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인 것이다. 남궁 석(南宮 晳) 정보통신부장관이 Y2K 문제해결의 핵심은 최고경영자의 인식전환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함께 '나만 해결하면 된다'는 안방논리도 문제다. Y2K 문제가 사회전반에 도미노적 재앙을 몰고올 것이란 전망은 모든 분야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국방 금융 산업체가 각각 내부의 Y2K 문제를 해결해도 Y2K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업을 하기 위해선 전기도 필요하고, 전화도 있어야 하고 물(水)도 써야한다.

때문에 전력과 통신, 수도의 Y2K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결한 금융전산망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선결과제는 Y2K 문제가 마치 컴퓨터와 PC로 연결된 전산망에만 국한되는 컴퓨터 문제라는 인식이다.

핵발전소의 Y2K 문제는 핵발전소를 통제하는 핵발전 전산관리시스템의 Y2K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냉각수를 끌어올리는 대형 펌프에는 무수히 많은 반도체칩들이 내장돼 있다.



Y2K 문제는 전산실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인 것이다.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이 Y2K 문제해결의 핵심은 최고경영자의 인식전환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이러한 칩중 연도표기 기능이 있는 반도체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 이런 칩들이 2000년 1월 1일 오동작을 할 경우 냉각시스템과 펌프는 얼마든지 멈춰버릴 수 있다. 이른 바 비전산분야(Non 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자동차회사의 전산망과는 무관하게 자동차조립 로봇에 장착돼 있는 수천, 수만개 반도체칩의 Y2K 문제가 또다른 복병인 것이다.

LG-EDS 오해진 부사장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건 기업이건 이를 총체적으로 챙길 책임자가 없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기기 오작동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 Y2K 문제 해결진척도가 매우 낮아 내년초부터 의료사고가 폭증하면서 의료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의료장비 대부분이 Y2K 문제로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네의 소규모 의원들은 Y2K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의료분야의 Y2K 문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달 20일 서울대병원, 한국전산원이 주최하고 한국일보사가 후원해 서울대학병원에서 열린 '의료분야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앤드류 윤 글로팍스사장은 'X선촬영기나 자기공명촬영장치(MRI), 심장박동감시장치, 심장부정맥치료장치, 혈석투석기, 이식형심장박동기 등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Y2K 문제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Y2K 문제로 인해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의료사고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사장은 "특히 생명유지장치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이 기기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잇따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사장은 의료기기 외에 병원전산망과 의약품관리 시스템, 각종 편의시설 등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존스홉킨스병원 블루블럼 고문은 "Y2K는 환자의 진료기록에 에러를 발생시키고 각종 생명연장 의료기기에 치명적 오작동을 불러올수 있다"면서 "분석과 전환작업, 테스트, 비상계획 등 Y2K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석변호사는 "올해초 미국의 한 종합병원은 Y2K 모의실험을 한 결과 노인의 나이를 전산시스템이 잘못 계산, 소아병원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의료기기생산업체와 병원,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이 속출, 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이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변호사는 이에따라 의료분야 Y2K 문제로 인한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Y2K의료분쟁을 전담하는 조정기구의 설치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분쟁을 소화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 이철행 박사는 "의료분야의 경우 Y2K 문제로 인해 고객소송과 상해소송, 집단소송 가능성이 타분야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외국의 경우 이미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Y2K해결 5단계

Y2K해결은 일반적으로 다섯 단계를 거친다. 문제인식 각종 전산자료를 준비해 Y2K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모두 찾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종 전산자료가 컴퓨터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하고 Y2K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영향평가 Y2K 해결여부를 점검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각 기관 및 부서는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서 및 외부기관, 통신장비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Y2K해결을 위해 인력 투입, 해결소프트웨어 사용, 시스템 교체방법 가운데 한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변환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날짜부분을 두자리로 할 것인지 네자리로 할 것인지 확정해야 한다.

변환 실제 해결단계이다. 시간계획에 따라 해당 자료의 폐기, 수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 외부업체에 작업을 맡긴 경우 책임범위와 완료예정일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또 외부와 연결된 자료가 많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변환작업도 실시해야 한다. 검증 모든 변환작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단계이다. 검증절차는 99년과 2000년말까지 위험요인이 있는 여러 가지 날짜를 사전에 모의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실행 실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특히 외부와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단계 작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 확인하면 된다. 미국 국방부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날짜들의 목록을 만들어 검증 및 확인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문제해결 30.9% 진척

우리나라는 과연 Y2K 문제를 얼마나 해결한 상태인가 미국 가트너그룹은 우리나라를 2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2그룹은 총기업수에서 Y2K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33% 수준인 나라를 통칭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15%이내로 1그룹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Y2K를 사실상 포기한 나라들은 4

그룹(66%)으로 분류됐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 홍콩이 각각 3그룹(50%), 4그룹으로 분류돼 Y2K해결 상황이 더딘 편이며 싱가포르는 2그룹이다.

그러나 2그룹인 우리나라의 나머지 67% 기업이 Y2K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정통부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회전반의 Y2K 문제해결을 위한 공정진행 비율은 98년 8월기준 불과 30.9%로 나타났다.

Y2K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시스템의 비율 또한 불과 2.2%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공공부문은 4%, 민간부문은 1.5%만이 Y2K에서 완전 탈출했을 뿐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금융분야가 57.4%의 공정진척도를 보여 가장 앞선 분야로 나타났다. 의료분야도 51.5%로 평균을 크게 넘고있으며 운송(38%), 전력및 에너지(31.3%)도 앞선 분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원전(25%), 통신(24.4%), 항만(26.6%) 등 사회간접자본들이 평균이하 점수여서 우려를 낳고있다. 산업설비 또한 29.8%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의 경우는 261개 상장기업의 진척도는 25.6%로 공공부문보다 낮은 상태다.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하면 국내 민간기업의 Y2K해결 진척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0.6%로 가장 앞서있고 비금속광물업이 39%로 그 뒤를 잇고있다. 반면 비정보시스템분야는 22.1%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세계각국 Y2K해결 진척 상황

세계적인 정보통신 컨설팅기관인 가트너그룹은 지난해 10월 세계 각국의 Y2K 대응현황을 조사,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97년 12월 같은 조사에서 4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2등급으로 2단계 향상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가트너그룹은 2000년이 되면 전세계 기업의 40%가 주요 전산시스템에 Y2K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아시아의 경우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제 규모가 큰 일본과 독일의 회사 절반이상이 곤란을 겪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66%가 대처를 못한 채 2000년을 맞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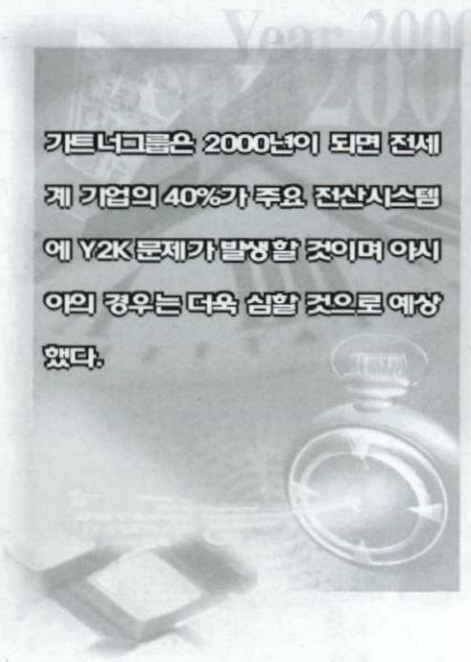
국가별 등급은 미국 호주 등이 1등급, 한국, 프랑스, 대만 등이 2등급, 일본, 독일이 3등급, 중국, 러시아가 4등급을 받았다. 산업별로는 금융, 제약, 컴퓨터 부문의 대응이 양호한 편이며 전력 상하수도 운송 의료부문은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트너그룹은 이번 발표에서 Y2K의 파장이 세계 경제에 3년에서 5년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경영자 의지 성패 좌우

지금까지 Y2K 문제는 전산실무자들의 몫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전산, 비전산 분야를 통틀어 Y2K 문제가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순히 전산자료의 날짜만 바꾸는 작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게 아니라 비전산 분야인 공장시설의 작동여부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전산실무자에게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만일의 경우 문제가 발생



가트너그룹은 2000년이 되면 전세계 기업의 40%가 주요 전산시스템에 Y2K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아시아의 경우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면 국가나 기업사이에 엄청난 소송사건을 일으키는 등 국가신인도를 좌우하는 문제로 커질 수 있어 최고경영자가 나서지 않으면 책임소재는 물론이고 해결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해부터 Y2K 문제 해결여부가 통상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 바이어들은 해당기업체의 Y2K 진척여부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진척여부 및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실제 일부기업들은 외국수입선의 요청으로 이같은 내용을 서류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같은 무역협상이 늘어나면서 외국 수입업체들에게 믿음을 주고 나중에 Y2K 사고에 따른 엄청난 액수의 소송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

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 컨설팅업체들은 Y2K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사건이 총 1조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지난해 모든 업종에 걸쳐 3천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경영진의 인식부족이 Y2K해결의 최대걸림돌로 꼽아 최고경영진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를 증명하듯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Y2K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현대그룹. 현대그룹은 지난해 8월 각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Y2K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박세용(朴世勇) 현대종합상사 회장을 위원장으로 43개 계열사 사장들이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또 관련 실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각 사의 이사급을 팀장으로 한 운영위원회와 실무팀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그룹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별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 격월간으로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 각 계열사별 최고경영층을 독려해 문제해결을 서두르고 있다.

위원회의 실무추진팀장인 손창근(孫昌根) 현대정보기술 상무는 "Y2K 문제가 전산실 등 특정부서에 국한된 사안이 아

3단계 해법

현황파악→전환→모의실험

▲ 인류 대재난을 예고하는 Y2K 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Y2K 문제는 컴퓨터가 연도를 두자리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대혼란을 말한다. 컴퓨터는 99의 경우 1999년으로 인식하지만 2000년을 표시하는 00년은 1900년으로 잘못 인식, 모든 데이터를 1900년 기준으로 처리한다.

지금껏 지적돼온 것처럼 적금을 든 가입자 고객정보가 사라지고 항공시스템이 마비되고, 원전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그렇다면 Y2K 문제의 대공포를 없앨 방안은 없는 것일까.

98년 8월 중순, 미 월가의 28개 증권업체 사장들은 긴장속에 카운트다운을 따라 세고 있었다. 28개 증권업체의 모든 전산망 연도를 1999년 12월 31일로 맞춰놓고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숨막히는 순간을 손에 땀을 쥔채 지켜보고 있었다. 수분후 28개 증권사 사장들은 환호성을 올렸다.

세계 최초로 Y2K모의실험에 나섰던 미국 증권업협회의 대모험은 이렇듯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월가의 환호는 Y2K 문제 해결방식을 철저히 세분화, 단계를 밟아가며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 Y2K 문제는 그 광범위한 영역만큼이나 해결방식도 매우 복잡하다.

우선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Information Technology)분야와 반대개념의 비전산(Non IT · 비정보)분야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 정보분야란 은행처럼 컴퓨터망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의 기업이 대표적이다.

비정보분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경우, 공장의 기계와 로봇들은 대부분 전자적으로 제어된다. 이를위해 대부분 수많은 반도체칩을 내장하고 있다. 문제는 칩중 연도기능이 있는 반도체들이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오작동을 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Y2K 문제가 이렇듯 두 부류로 나눠 해결해야 하지만 풀어가는 방정식은 비슷하다.

해결하려면 우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현황파악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송우정보시스템 신종철 사장은 "Y2K 문제 해결의 첫 걸음마는 어디에 연도표기 기능이 부여돼 있고 또 어떤 장비와 프로그램들이 연도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점검작업은 매우 방대하다. 전문가들이 비전산분야의 Y2K 문제 점검을 '해변에서 바늘찾는 격'이라며 곤욕스러워하는 것도 이 때문. 완벽한 현황파악이 끝나면 본격적인 전환작업에 나서야 한다.

전환방식은 크게 세가지.

정보분야의 경우 연도를 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두 찾아 네자리로 바꿔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변환과 함께 일부 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하는 '전환+교체' 방식을 추천한다.

▲ 물론 이때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보관해 두는 백업작업은 기본.

기능이 단순한 일부 산업설비의 경우는 연도를 1970년과 같이 수십년 뒤로 입력하는 '연도연기방법'도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시스템 교체방식은 돈이 많이 들고 교체시 업무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할 방식. 전환이 끝나면 전산망의 날짜를 1999년 12월 31일로 바꿔놓고 2000년 1월 1일이 됐을 때의 상황을 체크하는 모의시험에 나서야 한다.

니라 전사적 차원의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고 기업의 모든 역량을 끌어모으기 위해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전산관리를 맡고 있는 시스템통합(SI)업체인 삼성SDS의 김홍기 사장도 그룹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있다. 수시로 전담팀과 회의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LG그룹의 Y2K 문제해결을 떠맡은 LG-EDS의 김범수 사장도 직접 Y2K 문제 해결을 독려하고 있다. 담당팀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계열사별 진척도 여부를 손수 챙기고 있다. 국내 SI업체 관계자는 "아직도 Y2K 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책임지기 싫어서 임원이나 실무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며 "최고경영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Y2K 인증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인증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에도 최근 Y2K 문제 해결 결과를 공인하는 Y2K인증센터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대내외적으로 공인받을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느 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Y2K 문제 해결인증제도를 만들었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4월 각국 금융기관의 Y2K 문제 해결 추진상황을 공개하자는 제의를 했고, 미국 클리어링하우스도 올해 4월께 전세계 금융망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 아·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국가사이의 Y2K 문제와 관련된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유엔도 정기총회때 국제적 차원에서 Y2K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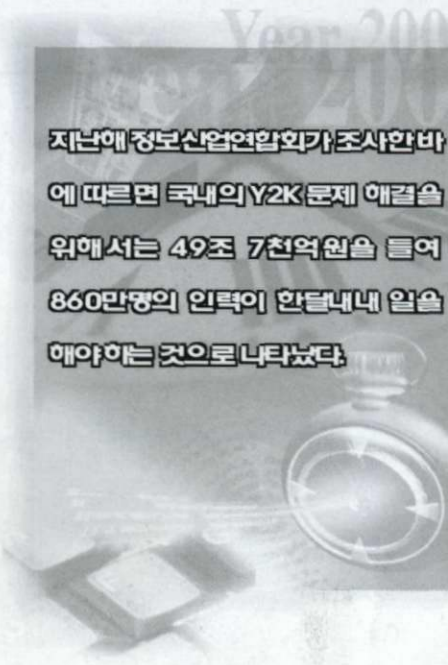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Y2K인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미국 정보기술협회(ITAA)의 표준과 ITAA가 지정하는 전문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활용하면 미국 등과 손발을 맞춰 Y2K 문제해결을 인증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도 공인받기가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증시스템을 확인 및 인증 수행체계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문서확인 및 현장실사 등 검증절차도 2가지로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Y2K 문제가 범국가적 사안인만큼 정부가 나서서 인증지침과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해결비용 1,943조원

'Y2K 문제 해결비용은 얼마나 들까' 세계 각국의 조사기관들은 전세계에 걸쳐 Y2K 문제 해결을 위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교체 등 모두 1조 5,300억달러(약 1,943조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 비하면 일본 고베대지진 피해액은 10조엔(약 100조원), 3천여명이 숨진 중국 양쯔강 대홍수 피해액은 약 200억달러(25조 4천억원)에 불과했다. Y2K 문제가 20세기 최대재앙으로 꼽히는 이유를 해결비용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정보산업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9조 7천억원을 들여 860만명의 인력이 한달내내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410만명의 인력과 21조 9천억원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은 450만명과 27조 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는 행정, 국방, 사회보장, 보건 등 공공분야로 11조 2,153억원이 필요하다. 금융, 통신분야는 10조 7,605억원,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은 3,206억원, 금속, 기계장비 분야는 5조 5,376억원, 영상, 음향, 의료, 정밀장비분야는 2조 9,805억원, 부동산 및 개인서비스는 2,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